

남북한 화해협력과 통일의 전망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김 병 로

북핵 관련 6자회담이 2007년 2.13합의로 급물살을 타게 됨으로써 북미관계와 통일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한국의 대사회주의권 수교가 이루어졌고, 2000년 6월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데 이어, 세 번째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되기 직전에 와 있다. 한미 FTA와 함께 북미관계가 진격적으로 개선되면 통일환경은 제3의 물결과 같은 변화를 맞게 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정치대화와 경제협력, 인적 왕래와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차에 걸친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간 정치협상을 진행했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인도주의의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남북간 교역은 연간 12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남북간 철도·도로 개통, 개성공단 건설 활성화,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공연과 스포츠교류 정례화된 민족행사 등의 사회문화 협력이 추진됨으로써 연간 10만명 이상의 인적 왕래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말근사전 공동편찬을 위한 협력, 북한청소년 대표팀 남한 전지훈련 허가, 남북공동의 노동절 행사, 방 송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방북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연간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 옥수수 10만톤 등의 인도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14차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14,471명의 가족이 상봉했고, 39,374명의 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남북간에 협의하는 수준으로 진전되었다.

과거에 비해 대화와 교류가 생산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남북간에는 정치군사 문제로 인해 대화와 교류협력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을 여전히 안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통해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진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 교류협력 사업을 제도화·안정화하여 거래비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는 6자회담의 성과에 따라 긴장완화와 평화선언을 통한 협력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남북의 협력관계는 남북간에 연합과 연방, 그리고 정치통합의 수순을 밟으며 통일로 진전될 수 있다. 물론 남북 통일정부 구성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정치군사적 보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책을 급선회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정권을 붕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북한은 과연 핵 선군정치를 포기할 것인가 등의 불확실성을 변수로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경제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치대화와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차기 정권 5년(2008-2012) 동안 관련국간의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협상이 타결되고, 차차기 정부(2013-2017)에서는 연합형태의 남북통일정부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분단비용을 줄이고 공유가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